

아파트·보일러 규모 따라 LNG·경유 사용 의무화

경남 진해시,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시·군의 아파트나 건물 보일러 연료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난방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던 지역 가운데 진해시의 경우 9월부터 25평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0.5톤 이상 업무용 보일러 연료를 공해가 적은 청정연료나 경유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남의 김해, 경북의 포항·구미, 전북의 전주·군산·익산 등 6개시 지역도 18평 이상 공동 주택과 0.2톤 이상 업무용 보일러의 연료를 LNG등 청정연료나 경유만 쓰도록 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25평 미만 공동주택이나 0.5톤 미만 보일러도 경유를 사용해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왔다.

물절약 못하면 도시·공단조성 “제한”

앞으로 물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나 공단조성이 제한되고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기존 건물도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실내체육관처럼 넓은 지붕을 가진 건축물은 빗물이용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정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의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19일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 상정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물부족에 대비, 수도물 절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시·도지사가 시·군·별 물수요관리 목표를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산업단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재이용을 위해 물을 다량 쓰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처리 후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세제·요금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시설에 한정된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을 숙박업, 목욕탕, 골프장 등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한 정수장 운영 등 수도사업에 민간 참여나 전문기관 위탁을 허용하고 수도물 다량 사용처에 높은 요금을 매기거나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 하는 '절수형 요금체계'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따라서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수도, 절수설비, 빗물이용시설 등의 확대 보급을 위해 전문업체인 '물절약투자대행업종'의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대기환경 기준치 대폭 강화

경기도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한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대기 환경 기준치에 따르면 아황산가스(SO₂)는 정부 기준치인 연평균 0.03㎍에서 0.015㎍으로, 일산화탄소(CO)는 9㎍에서 7㎍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이산화질소(NO₂)는 연평균 0.05㎍에서 0.04㎍으로 강화되며, 미세먼지도 연평균 80㎍/m³에서 70㎍/m³으로 낮아진다.

특히 파주 안성시와 양주 가평 양평군 등 공기가 맑은 9개 시군은 아황산가스 0.01㎍, 일산화탄소 3㎍, 이산화질소 0.03㎍, 미세먼지 40㎍/m³ 등으로 환경기준치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번 대기환경 기준치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절수시설 전문대행제 내년 시행

환경부는 절수시설설치 등 물절약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물절약전문대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9일 물절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시설설치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대행업체 등록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개정안을 연내 확정,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행대상사업장은 공동주택에서 대형건물 및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절수시설설치로 물절약 효과에 따른 경제성이 보장되는 모든 건물 및 사업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시행방법은 전문대행 업체의 경우 절수기기 및 중수도 등 절수시설을 설치, 투자비회수기간동안 운영을 맡아 투자비 회수완료 후 사업장에 인계하며 위탁하는 사업장에서는 절수시설 설치 이후 절감되는 절수 비용을 전문대행업체에 일정기간 지급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문대행업체에 절수기기 설치자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수도시설 설치를 할 경우 전문대행업체 및 해당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설치비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도 25%정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절약투자사업 전문대행시스템시행으로 물값을 절수시설 설치전의 45~63%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

고 특히 전문대행업체의 경우 시장확보를 위해 절수공법 신기술개발에 노력하게 돼 전문대행업이 환경산업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신설 관거정비 병행

앞으로 지자체 등에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난 7월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향으로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을 개정,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처리장설계내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 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정비가 동시에 이뤄져 적정 유입수질을 확보토록할 계획이다.

또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의 증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우선적으로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기로 했으며 특히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에 70% 이상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거내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불량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현재의 2.5배인 50%까지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수립시행을 의무화해 하수처리장의 장비세척수와 냉각수, 청소수, 조경용수 등을 전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토록 하고 주택단지 등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소방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처리 효율향상 및 소하천의 건천화방지와 수중생태계보호를 위해 하수처리를 분산처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하수처리구역을 수계별·소구역단위로 설정, 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하수차집효율을 높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과 산업단지 등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 하수처리장을 단지내에 설치, 발생하수를 직접 현장에서 처리해 인근 하천에 방류토록할 계획이다.

환경부, 취수장 126·정수장 143곳 신증설

환경부는 물수요 증가에 대비, 오는 2006년까지 지방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시설을 대폭 확충기로 했다.

또 현재 일부 정수장에만 건설·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간 물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취수장과 정수장등 지방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지방상수도의 취수장 126개소 및 정수장 143개소를 신·증설하는등 시설 확충을 통해 상수도처리율을 하루 3천855만톤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 16개 정수장에 건설·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키 위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물질약시책을 강화키 위해 중수도시설 설치를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재 공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수도시설에 대해 민간위탁관리 및 민간위탁경영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까지 농어촌가뭇지역 및 수질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식수전용 저수지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6천800억원을 투자해 30개소를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낙동강유역에 시범개발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사

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하는 등 도서지역의 식수공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시설업체가 환경工事 못해”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시설공사업을 독립업종으로 신설하고 공제조합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환경전문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 지난 7월 27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 협회의 건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지난 1, 2년간의 경제난 여파가 울들어 환경산업계를 덮치고 있는데다 제도상의 미흡으로 입찰 등 수주경쟁에 참여가 봉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환경시설공사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과 함께 일반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의 일부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건설업종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적은데도 환경산업체는 환경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자본금의 경우 개인 20억원, 법인 10억원 이상에다, 기계·화공·전자·통신·정보처리·에너지·국토개발 등 관련 기사자격자 10명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명백한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고자 해도 불필요한 기술인력 규정에 걸려 응찰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는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시설공사업을 일반건설업 중 독립업종으로 신설하고 자본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기술인력도 환경시설 건설에 필요한 환경·토목·기계 등 5명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냈다.

다이옥신 제거 촉매 개발 - 전북대 환경공학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새로운 촉매물질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전북대 환경공학과 정태섭 교수(42) 등 연구팀은 “금물 질인 바나듐과 몰리브덴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분해시킬 수 있는 금속산화 촉매물질을 개발, 특허를 신청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정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전북대병원 쓰레기 소각장이 이 촉매를 설치한 뒤 실험해 본 결과, 다이옥신을 100% 산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각장과 공장 등에서는 활성탄(숯)이나 백금 촉매를 이용해 다이옥신을 제거해 왔으나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2차 오염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활성탄을 사용할 경우 다이옥신을 흡수한 숯가루를 땅에 묻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백금 촉매 역시 외국에서 수입,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정교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백금촉매제는 대형 소각장의 경우 10억~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개발로 관련 시설이나 촉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교수는 같은 학과 김종국 교수를 비롯, 서남대 강성수 교수, 전남 광양대 이민호 교수 등과 함께 벤처기업 ‘하이엔텍(HI-ENTEC)’을 설립하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공장을 마련, 연말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자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2003년부터 포장용기나 가전제품 등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4일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유리병, 금속캔, 페트병, 타이어, 윤활유 등과 같이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유통업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같은 단체에 가입해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런 재활용조합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을 승인 받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의 분리수거량과 재활용업체의 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량을 정해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부터 업계와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과 형광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3년부터 포장재, 타이어, 윤활유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을 국가에 예치하도록 하는 현행 예치금제도는 폐지되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는 ‘재활용 부과금’을 물게 된다.

유해물질 한강유입 24시간 감시

서울시는 최근 미8군 용산기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한강 유입을 상시 측정,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중랑·난지·탄천·가양 등 4개 하수처리장 유입수계별로 무단방류지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마지막 유입지점 각 1곳을 비롯해 수계상류 지

점 1곳씩 총 8곳을 감시대상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 지점의 하수를 자동채수 후 포름알데히드, 시안, 페놀 등 17개종으로 분류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를 24시간 연속 또는 매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설치

4대강 유역의 수질을 보전을 위해 이들 강유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도와줄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이 구성, 운영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4대강 유역 환경감시대 산하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을 별도로 설치, 시설점검과 함께 계도성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환경감시대장의 지휘하에 운영될 기술지원단은 환경부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우수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기술인력과 환경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된다. 기술지원단에는 인천 대한산업(주), 광주 (주)장호, 울산 (주)엔비캠 등 총 25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술지원단은 해당 환경감시대의 정기점검기간 또는 자체 특별지원기간 중 ▲유입수 상태 ▲유량조정 기능 ▲포기조 상태 ▲슬러지반송 기능 ▲침전조 상태 ▲전체적인 오수처리시설 및 부속기기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기술지원단은 특히 현지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직접 개선조치를 해주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한달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최종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게 된다.

기술지원단은 활동실적을 매 분기별로 취합,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한 오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막는 것이 기술지원단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성 위주로 시설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원 상류 10km內 폐수시설 제한

앞으로 팔당·대청 등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호소 등의 상류 10km에서는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하천이나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으로 새로 추가, 2003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장 폐수처리장에서 질소·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배출양 등에 따라 부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수배출시설 등의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차등 부과하고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최고 80%를 줄여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기본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역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 3년간 감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 호소수질관리법은 폐지된다.

'새는 수돗물' 사업자가 비용부담

수돗물 누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책임지는 누수비용책임제의 도입을 비롯한 수도요금체제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초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누수비용을 수도사업자부담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현재 업종에 따라 6개로 세분화돼 있는 수도물요율 차등적용 기준을 3~4개 업종으로 단순화해 영업용은 낮추고 가정용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물수요가 많은 하절기와 수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갈수기에 수자원의 합리화를 위해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뒤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수도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6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1만742업소를 점검한 결과 915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6월중 환경오염업소를 단속한 결과 한국코가콜라보틀링(주) 외 409곳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으로 고발됐고, (주)백광소재 단양공장 등 257개소가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조치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시 단속건수(9,255건→10,742건)는 증가, 적발건수 및 적발율(10.7%→8.5%)은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월과는 단속건수(11,416 건→10,742건)는 감소, 적발율(5.9%→8.5%)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전북 군산의 (주)스마일페이퍼(대표 이종하)는 중화탄광시설(48㎡×1기)인 응집시설(48㎡×1기)를 임의 철거하고, 응집제 등 약품을 투입하지 않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했으며 배출 허용기준 또한 BOD 163mg/l (기준120)를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됐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대표 개빈스튜디오트페이튼)의 한국코가콜라보틀링(주)은 콜라, 사이다 등 제품생산과정 및 영업소에서 반포된 제품을 파쇄·압착하는 과정에서 회당 10~15㎡의 폐수가 발생됨에도 사전 신고 없이 조업해 사용중지 및 고발 명령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시흥의 화승제지(대표 고영립)의 경우는 먼지 140mg/sm³(기준100), 카드뮴 화합물 1.338mg/sm³(기준1), 납화합물 11.5mg/sm³(기준5) 을 배출해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물질인 n-H를 19.5mg/l (기준5)와 음이온 계면활성제 6.2mg/l (기준5)를 배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의 영도섬유(주)(대표 김영상)는 과징금 6천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경찰청과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환경사범 2천67명이 사법처리돼 6월 환경오염업소 적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운영일지 미기록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적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환경 고려한 제품설계기법 본격 도입

국내에서도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DfE, Design for Environment)이 본격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휴대폰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DfE 적용기법 개발 및 시험설계 사업에 지난 8월부터 2년간 8억원의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31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르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유럽연합(EU)집행위는 2006년부터 역대 폐자동차에 대한 생산자 수거의무를 규정한 폐차처리지침, 휴대

폰, 컴퓨터, 냉장고 등 대부분 가전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수거 의무 및 재활용 소재사용비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폐기물 처리지침 방안을 통과시켰다.

〈용어〉DB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 환경성을 평가해 설계하는 선진 제품설계 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사범 크게 증가

환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4분기 중 수질과 대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환경사건 329건을 직접 수사해 이중 323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고 지난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7건에 비해 28%인 72건 증가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수질분야 121건, 대기분야 116건, 폐기물분야 71건, 유독물분야 3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 환경사범 수사건수는 총 612건으로, 전년 동기의 332건에 비해 무려 84.3%인 280건이나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사범 수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환경사범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환경특별사법경찰관들이 활동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사활동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는 현재 1천97명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들이 감사의 지휘를 받아 환경사범들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11개과제 국고 지원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환경

기술 개발사업으로 올해 11개 과제가 선정, 국고 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92년말부터 2002년말까지 수행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G-7사업)으로 올해 11개과제를 환경기술개발과제로 선정, 국고 21억원과 민자 13억원 등 모두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7월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11개 신규과제는 G-7사업의 전체 10단계 중 8단계 목표인 실용화, 상용화 위주의 기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단기간에 개발·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존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유화학공정 분야에서 다량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발생치 않도록 하는 대체기술의 개발과 이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으며, 기존의 읍, 면 단위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수시설 및 간이정수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마을 단위의 하수고도처리기술도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는 개발,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구종료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돼, 현안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산강 환경시설 대폭 확충

환경부는 영산강유역에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주암호와 수어호 주변지역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28일 광주에서 열린 주암호 등 영산강대권역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에서 이 지역의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1조3천757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70개소와 하수관거 1천495km, 산업단지 및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건설시 하수관거정비를 동시에 병행키로 했으며 농촌지역의 마을에는 기계식 하수처리장설치를 지양하고 습지정화 등 자연정화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하수처리공법채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공수역에서 원수를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일정요율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상류지역지원비재원으로 사용키로 하고 이를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비(400억원)와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비(850억원), 상수원지역 토지매수비(315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100억원)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 1조9천 613억원을 국고와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로 조달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조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인 포함

앞으로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하천 및 호소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총질소(T-N)와 총인(T-P)이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8월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업소의 질소와 인 처리시설 보완 및 신설 기간을 감안,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수 배출업소가 총질소, 총인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kg당

500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에 대해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경우 kg당 250원, 크롬과 아연 등 중금속은 kg당 3만~7만5천원, 페놀과 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은 kg당 최고 125만원의 부과금을 각각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57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새로 도입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질소 및 인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오염 신고전화 이용률 급증

환경오염 신고전화인 128번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6일 환경부가 올 상반기 중 전국 시·군·구와 지방환경청에 연결된 환경신문고 이용실태를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4만4,937건에 비해 3.5% 늘어난 것이며, 환경신문고가 첫 운영에 들어간 96년(하루 평균 128건)에 비해 93.8%나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신고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4만4,937건에 비해 3.5% 늘어난 것이며, 환경신문고가 첫 운영에 들어간 96년(하루 평균 128건)에 비해 93.8%나 급증한 것이다.

신고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연·생활소음·공사장 먼지 등 대기분야가 전체의 7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쓰레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분야(13.5%),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신문고는 전국 어디서든지 전화 128번을 누르면 단속공무원과 통화가 가능한 환경 오염 신고계도로 동일지

역은 국번없이 128번, 동일지역 외 신고는 지역번호와 128번을 누르면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환경신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전화 중 사실로 확인된 4,329건에 대해 8,760여만원 상당의 전화카드, 도서·문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물 사용량 98년 이후 감소세 보여

올 1/4분기에만 98년 같은 기간보다 4천300만t(214억원) 가량의 물사용량이 줄었다.

98년 이후 물 사용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8월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누수방지사업을 벌인 결과, 올 1/4분기에만 98년 같은 기간보다 4천300만t(214억원)가량의 물 사용량이 줄었다.

용도별 사용량으로는 98년 기준으로 가정용수 2.3%, 업무용수가 4.9% 감소했고 욕탕용수도 1종과 2종이 각각 4.6%, 16%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공장가동을 증가로 공업용수 사용량은 지난 98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정부중앙청사와 국회의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 수도꼭지와 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한 결과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월 대비 14%정도 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실적을 거둬에 따라 절수기 설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할 방침이다.

폐수 방류 하수처리장 등 7곳 시설개선명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올 상반기 중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52개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한 결과 울산시 온산하수종말처리장 등 7개소가 기준치를 초

과한 방류수를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나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 함안군 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인 30ppm을 3배 이상 초과한 116.80였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5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13배나 됐다.

또 함안군 산인농공단지와 의령군 부림농공단지, 부산시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BOD와 총인(T-P), 총질소(T-N) 등이 기준치를 위반한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울산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말 이후 총인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3차례나 적발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울산시 여천분뇨처리장과 녹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총인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업소 위반내용 인터넷 공개

경기도 수원시가 식품위생법규 위반과 환경오염업소의 위반내용을 사진과 함께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8일 장안구 정자동 N식당 등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177곳과 장안구 파장동 K상사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34곳 등 모두 211곳을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에는 위반업소들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이 실렸으며 특히 이들 위반업소의 사진과 위치도를 함께 표시, 이용자들이 쉽게 위반업소를 알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K상사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K산업은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과징금 징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수도권 공장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수도권 대규모 사업장 굴뚝의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수도권의 대규모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지역에 수도권지역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11일 밝혔다.

수도권지역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중부권으로 편입되는 이천시와 여주, 양평,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지역의 대규모 1종 사업장 80개소(총 171개 굴뚝)이다.

환경관리공단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구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년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올해 안으로 굴뚝배출 가스자동측정시스템(TMS)을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 관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사업장의 배출가스 배출량 분석자료가 관제센터로 자동이송되기 때문에 공장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분석자료를 대기오염 예보 및 배출부과금부과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굴뚝자동측정 관제센터 구축 대상인 4대 권역 중 호남권(여수산업단지)과 영남권(울산 온산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지난해 초와 올해 초부터 각각 운영에 들어갔으며, 중부권은 오는 2002년 관제센터 구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허가배출시설 여부

▶질의 : 사업장에 배치돼 미사용중인 기계나 기구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회신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동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해당됨. 다만, 설치하지 않고 구입보관중인 기계·기구는 무허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프라이텍인터내셔널, 일본 伯東(株)(HAKUTO CO., LTD.)와 기술조인식 가져



(프라이텍인터내셔널 백성흠 사장(우)과 伯東 YUKIO TOMMASAKI 화학사업부장의 조인식 장면)

수처리약품전문업체인 (주)프라이텍인터내셔널은 지난 8월 1일 수처리 시장의 선진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일본의 수처리 전문회사인 伯東(株)(HAKUTO CO., LTD.)와 정식 기술 도입 조인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주)프라이텍인터내셔널은 수처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REALTEC SM-1000, REALTECSPM-1000)을 일본에 수출하는 한편, 제지용 공정약품(Fixing Agent)을 새롭게 독자 개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텍은 미국업체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정용 약품(Antifoulant)시장에서도 독자적으로 상품화에 성공하여 판매하는 등 수처리 약품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약품에서도 시장을 확대하여 정밀화학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